

#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 10. 28

- ① 일본경제지표
- ② 주간경제이슈  
: 민간·경제교류로 돌파구 모색하는  
중일관계
- ③ 경제정책동향
- ④ 일본기업동향
- ⑤ 한국관련워치

## 1 일본경제지표

### □ 주간 사항지표

- 엔화환율 : 美 양적 금융완화정책의 장기화전망 확산으로 강세
- 장기금리 : 美 양적 금융완화정책의 장기화전망에 따른 일본 국채에 대한 매입 수요 증가로 하락세

구 분	10.21(월)	10.22(화)	10.23(수)	10.24(목)	10.25(금)
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달러당)	98.05	98.32	97.40	97.46	97.26
엔화의 대원화 환율(100엔당)	1,084.56	1,081.69	1,081.93	1,085.09	1,085.59
닛케이평균주가(종가)	14,693.57	14,713.25	14,426.05	14,486.41	14,088.19
장기금리(10년물 국채금리, 연리%)	0.620	0.615	0.605	0.605	0.615

### □ 주요 거시경제지표

- 2013년 9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비로는 8개월째, 전년 동월비로는 4개월째 연속 상승
- 2013년 9월 무역수지는 9.3천억엔 적자로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 \* 對한국 무역수지는 1.9천억엔 흑자로 전월보다 흑자폭이 소폭 확대

구분	2012	20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실질GDP증가율(연율,%)	1.2(2.0)	4.1(P)			3.8(P)			-		
수 출(천억엔)	639(637)	48	53	63	58	58	61	60	58	60
수 입(천억엔)	721(707)	64	61	66	67	68	62	70	67	69
對한국 수출	49.7(49.1)	4.01	4.25	5.21	5.07	4.61	4.54	4.77	4.59	4.57
對한국 수입	32.8(32.4)	3.12	2.92	2.81	2.58	2.85	2.57	3.04	2.78	2.72
직접투자(억달러)	(1,223)	234			331			-		
對한국 투자	(40)	7.7			9.1			-		
소비자물가(전기비,%)	▲0.2(0.0)	▲0.3	0.1	0.3	0.3	0.2	0.0	0.1	0.3	0.1
실업율(%)	(4.4)	4.2	4.3	4.1	4.1	4.1	3.9	3.8	4.1	-
경상수지(천억엔)	42.9(47)	▲3.6	6.4	12.5	7.5	5.4	3.4	5.8	1.6	-
엔화 對미달러 환율	82.9(80.1)	89.2	93.2	94.8	97.7	101.0	97.4	99.7	97.9	99.2
환율 對원화(100엔)	(1,413)	1,197	1,166	1,161	1,148	1,100	1,165	1,130	1,142	1,095
외환준비고(기말, 천억달러)	12.5(12.7)	12.7	12.6	12.5	12.6	12.5	12.4	12.5	12.5	12.7
국채금리(10년, 연리%)	0.560	0.740	0.665	0.560	0.600	0.860	0.855	0.795	0.720	0.680

주1. ( )는 역년(1~12월)기준

2. 소비자물가, 실업률, 환율은 기간평균, 자료: 닛케이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3. (P)는 2차 속보치(개정치)

### □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report watching site)

- 『아베노믹스의 4가지 시나리오: 디플레 계속, 금융억압, 고인플레이, 해피엔딩』 자본시장연구회, 10월 22일

\*출처:<http://www.camri.or.jp/annai/shoseki/gekkan/2013/pdf/201310-11.pdf>

- 『일본경제재생에 관한 3개 연구소 공동세미나 자료』 경제사회종합연구소, 10월23일

\*출처:<http://www.esri.go.jp/jp/workshop/forum/130925/gijisidai.html>

## ② 주간경제이슈 : 민간·경제교류로 돌파구 모색하는 중일관계

### □ 중·일 교류단 상호 방문

- 중·일 관계가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강경일변도의 대일 태도를 수정하기 시작했다고 닛케이신문이 보도
- 9월 중국기업의 CEO들이 일본의 정재계 인사들을 방문한데 이어,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35주년 기념행사가 10월 22일 북경에서 개최
- \* 중국의 대일교류단체인 중·일우호협회가 주도

### □ 일본기업과 관계회복을 모색하는 중국 지방정부가 앞장

- 특히, 중국의 지방정부가 일본기업과의 관계회복을 모색하기 시작
- 중국의 지방정부는 정치만이 아니고 경제분야까지 관계가 냉각되는 이른바 「政冷經冷」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확산
- 중국 사천성 성도시에서 23일 개막된 국제전분시 서부국제박람회에 약 70개의 일본기업과 지자체가 참가
- 12년에는 반일 데모로 개막전일 일본기업들의 부스가 철거되었으나, 이번에는 중국 측이 일본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재해예방을 주제로 일본의 추진상황을 소개
- 최근 중국의 대일 대응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배경에는, 중국경제의 고속 성장이 끝나고, 고용창출형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 그리고 재차 대외개방을 통한 안정성장이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임
- 환경과 의료 등 일본의 첨단 분야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큼
- 중국이 이웃 나라와 군사적으로 충돌할지 모르는 상태가 계속되면, 다른 나라들도 중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일본과의 관계회복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
- 특히, 중국의 지방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일본을 포함한 외국인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
- 최근 일본을 방문한 중국 대기업 관계자는 경제관계까지 냉각되는 경우 중·일 관계를 타개할 실마리가 없어지게 될지 모른다고 우려

### □ 방일 중국인 수도 크게 증가

-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의하면, 2012년 9월 센카구도(중국명, 다오이다오) 분

쟁이후 감소되고 있던 방일 중국인 수가 1년 만에 플러스로 반전

- 특히 12년 가을부터 방일 중국인의 60~70%를 점하는 단체방문객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현재는 중국내 방일 관광에 대한 자숙분위기가 풀려 회복 추세

## □ 중·일간 군사적 긴장도 완화

- 13년 1월에는 중·일관계가 가장 긴박했던 상황으로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아 지기도 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일본과의 관계가 이런 상태로는 좋지 않다고 지시
  - 이에 따라 중국 외무성은 ▷센카쿠도의 영유권 문제로 분쟁이 있음을 인정 ▷분쟁을 보류 ▷분쟁이 악화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등 3가지 방침을 결정
  - 중국은 일본에 원칙론에서는 양보하지 않았으나, 대립이 심화되는 것은 피해야 된다는 입장임

## □ 그러나 중·일 관계 해빙까지 시간이 걸릴 듯

- 그러나 경제교류가 시작되더라도 중·일관계가 진전될 것이라는 전망은 약한 편임
  - 특히, 중국은 센카쿠도를 둘러싼 자세를 완화시킨 것이 아니라고 닛케이신문은 보도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아베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점에 대해서도, 중국이 침략의 역사를 직시하라고 반발하고, 연말까지 방위계획대강 작성과 집단적 방위권 행사 용인에 관한 논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 정상회담과 외교장관회담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음
  - 닛케이신문은 중국이 우선은 민간과 경제교류를 재 시동시켜 일본 측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타협을 끌어내려는 속셈도 있다는 점을 들어, 중·일 관계가 해빙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음
  - 센카쿠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지도부도 일본으로부터 타협을 끌어내지 않으면 일말의 책임을 면치 못할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어, 중·일 관계의 본격적인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
- 앞으로 초점은 11월로 예정된 약100명 규모의 일중경제협회의 방중단 파견임
  - 중국이 군사적으로도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논리만으로는 대립을 풀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어떻게 충돌을 피하고 협력할 것인가, 그리고 민간외교가 어디까지 진전될 것인가에 주목되고 있음

### 3 경제정책동향

#### □ TPP 겨냥, 쌀에 대한 고가격 유지제도를 재검토

- 일본정부가 쌀의 수확량을 조정하여 고가격을 유지하는 생산조정제도의 축소·철폐 등을 검토
  - 이는 아베정부가 TPP를 겨냥하여 농정개혁의 일환으로 대규모 생산자를 지원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생산조정 보조금 삭감도 검토 중
  - 그러나 농업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어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현행 생산조정제도 하에서는 농림수산성이 매년 11월경에 다음해 주식용 쌀 생산수량목표를 결정한 후, 도도부현(都道府県)별로 수량목표를 할당하고, 농가가 그 범위 내에서 생산하고 있음
  - 수요에 맞추어 쌀 생산을 조정하여 가격을 유지할 목적에서임
- 유력한 검토안의 하나는 생산조정에 대한 관여를 줄이는 것임
  - 농림수산성은 쌀의 수급전망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생산수량 목표 설정 등은 자치제 중심으로 맡기는 방안임
  - 도도부현 간의 생산한도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활용하여 자치체가 대규모 경영을 목표로 하는 생산자에게 생산한도를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함
- 앞으로 수년 후를 목표로 이 같은 방식으로 이행하여 대규모 생산자가 자유롭게 주식용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산업경쟁력회의의 민간의원들 가운데는 생산조정제도 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일본 정부는 14년도부터 신제도로 이행하기 위해 13년 11월말을 목표로 정부 방침을 확정
  - 10헥타르 당 15,000엔의 보조금을 수천엔 이상 줄임으로써 생산조정의 메리트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대상자도 약 11만 건에서 대폭 축소
  - 쌀의 실제 판매가격이 기준가격을 하회한 경우에 차액을 다음 해에 지급하는 변동보조금도 없애 생산자의 자립을 촉진시키는 한편, 사료용 쌀과 가공용 쌀은 보조금을 늘림
- 일본 정부 내에서는 다수의 안을 기초로 생산조정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쌀의 생산면적과 수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실시
- 생산조정제도는 민주당 정권 당시 2010년도에 쌀 농가에 10헥타르 당 15,000엔의 정책보조금을 지급하는 호별 소득보상제도를 도입했는데, 동 제도는 생산조정에 따르는 것이 지급의 조건

- 아베 정부도 동 제도를 계승했으나 야당시대에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한 경위도 있어 재검토를 추진하게 된 것
- 그러나 정부여당 내 조정기간도 1개월 정도로 짧아, 농업단체의 반발도 예상

## □ 경제산업성, 해상풍력발전 육성키로

- 일본정부가 태양광에 이어 풍력발전을 육성하기 위해, 전력회사의 풍력매입가격을 내년도부터 인상키로 함
  - 해상풍력에 대한 높은 전용가격제도를 신설하여 육상 풍력의 1.5~2배로 늘려나가겠다는 방침
  - 동시에 민간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태양광 가격은 인하하고 풍력에 대한 투자도 유인함으로써 에너지를 다양화하려는 것이 목적
- 일본 정부는 13년도에 에너지 기본계획을 책정할 방침임
  - 장래 원전의 신·증설 가능한도가 불투명한 가운데,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균형된 재생에너지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 11월에 경제산업성이 검토에 착수하여 일본 국내에서의 실증시험과 해외사례를 기초로 해상풍력의 건설비용과 발전효율 등 가격설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 새로운 매입가격은 경제산업성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내년 봄까지 최종결정
- 일본정부는 2012년 7월 재생가능에너지의 매입을 전력회사에 의무화하는 고정가격매입제도를 도입했는데, 풍력의 매입가격은 킬로와트 당 22엔으로 채산이 맞지 않아 민간사업자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음
  - 일본의 고정가격매입제도는 초년도에 태양광발전에 유리한 가격이 책정된 영향도 있어 이제까지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발전설비의 90%이상이 태양광에 집중
  - 풍력은 적합한 지역이 북해도와 동북지방 정도에 한정되어 있는데다, 환경영향평가에도 시간이 걸려 도입이 부진한 실정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도입 잠재력이 육상보다도 클 것으로 보여 지고 있음
  - 현재 마루베니 등이 이바라기현에서 출력 24만킬로와트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르면 2016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내년도부터 유리한 매입가격이 설정되면 다른 민간기업들도 잇따라 참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4 일본기업동향

### □ 후지츠, 전자제품 생산전문기업(EMS)으로 변신

- 후지츠가 제조수탁사업에 참여한다고 발표
  - 3D프린터를 사용한 시제품에서 전자기기의 양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생산을 수탁하게 되는데, 주로 일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고기능제품과 소량부품을 수탁생산
  - 고품질·단납기를 경쟁력으로 한 대만 등의 수탁서비스에 대항하고, 일본 국내 제조업의 모노즈쿠리기반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일본기업들은 엔고를 비롯한 6중고의 영향으로 대만기업에게 가전과 IT 분야의 EMS생산방식을 위탁해 왔음
- 후지츠는 일본의 인건비가 높기는 하나 축적된 생산기술을 잘 활용하면 대만과 중국의 EMS에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룹 내에서 일본 국내에 23개 생산거점을 가진 후지츠는 PC와 서버, 휴대전화의 조립에서 생산설비제조, 정밀부품의 가공까지 폭넓게 참여하고 있음
- 새로운 수탁사업은 이들 생산거점을 활용하여 시제품과 부품, 컴퓨터, 가전, 의료기기 등의 제조를 수탁하게 되는데, 2016년까지 300억 엔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음
- 후지츠는 2004년에 도요타자동차의 토요타방식(TPS)를 도입하고 여기에 IT수법을 접목하여, 후지츠 생산방식(FJPS)을 개발
  - 시마네현 이즈모시에 있는 후지츠의 생산라인은 중국의 EMS의 1/7 인원으로 노트북을 조립하는 등 생산성이 매우 높음
- 후지츠는 지리적인 이점을 살려 단납기로 일본 국내 업체들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품과 수량이 적지 않고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운 부품 등의 생산을 수탁하겠다는 전략
  - 범용품은 여전히 대만과 중국의 EMS쪽이 코스트경쟁력에서 앞서나, 일본 국내용 고기능·고품질 제품과 다품종소량제품에 분야에서는 대만과 중국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 파나소닉의 반도체부문, 7,000명 인원감축

- 파나소닉이 반도체사업을 대폭 축소
  - 약 14,000명의 종업원 중(연결종업원) 2014년도까지 약 7,000명을 감축하고 해외기업과 일부 공장의 매각도 추진함으로써, 반도체부문의 경영자원을 자동차용과 산업기기분야로 전환
- 파나소닉은 반도체사업의 부진으로 2013년 3월까지 2분기 연속 대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TV, 휴대전화에 이은 구조개혁을 가속화
- 일본의 대형 가전업체들은 반도체를 가전 등 자사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설정하여 확대해옴
  - 그러나 한국 업체와의 가격경쟁 격화로 채산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최근 수년 동안 반도체 사업을 핵심 사업에서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 파나소닉의 구조조정으로 일본의 반도체산업은 더욱 축소될 전망
- 파나소닉은 일본 국내를 비롯하여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반도체 주력공장이 있는데, 이제까지도 생산능력을 축소해왔으나 매출감소로 고정비 부담이 계속되고 있음
- 일부 공장은 이스라엘의 반도체수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타와지즈와 매각교섭에 들어가 이르면 금년 중 합의할 예정
- 반도체사업의 종업원은 해외공장 중심으로 감축할 예정
  - 일본 국내는 이미 조기퇴직을 마무리하고 전환배치로 대응
  - 종업원 감축으로 2013년 회계연도에 500억 엔의 구조개혁비용을 예상하고 있으나 경영실적 개선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반도체 개발은 TV와 휴대전화 등 디지털 가전용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차체와 산업기기용으로 중심축을 이동
  - 파나소닉은 전력제어에 사용되는 파워반도체와 센서 분야에서 자사기술력을 활용하여 외부판매를 늘려 채산성을 높일 계획

## 5 한국관련위치

### □ 한국의 TPP정책과 한일 FTA문제

- 넛케이신문이 10월 23일자 기사에서 「TPP참가, 한국의 고뇌」라는 제목으로 FTA대국을 자인하는 한국이 TPP를 둘러싸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한국의 TPP정책과 한일 FTA문제 등을 다룸
- 산업통상자원부도 TPP는 시기상조라고 입장 선회
  -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APEC회의 기간 중 TPP에 대한 박 대통령의 명확한 발언은 없었는데, 이에 대해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한국의 정부관계자가 발언
  - 한국 정부 내에서는 외교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중론을 펴는 구도이나, 이번에는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선회
- 한국 정부의 2단계 TPP 전략
  - 다음 고비는 연말부터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한국정부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는 것
  - 그때쯤이면 한국이 내년 상반기 중 타결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참가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라는 것
  - 박 대통령은 APEC회의에서 TPP 참가국들의 정상들과 연쇄회담을 가졌는데, 캐나다와는 금년 중 FTA교섭 타결에 노력하기로 합의
  - 한국은 12개 TPP참가국 중 미국 등 7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
  - 한국은 여타 가맹국들과의 FTA교섭을 가능한 한 추진하여 TPP가입 시 부담을 적게 하는 이른바 2단계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
- 한국의 TPP참가에 일본이라는 장벽
  - 그러나 TPP참가를 결정한다 해도 장애물이 적지 않다는 지적
  - 농업 분야의 시장개방에 대한 저항은 일본과 다를 바 없으며, 한·일이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으로, 일본이 이번에는 장벽

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 한국으로서 TPP는 사실상 2004년부터 교섭이 중단된 한일 FTA체결을 의미하는 만큼, 경합업종 관련 단체들에게는 민감한 문제임
- 2009년에는 약 5%였던 수입차의 한국시장점유율이 최근 12%정도까지 상승했는데 원화 강세만이 그 이유는 아님
  - 현대자동차의 경우, 일본 업체들이 한미FTA로 인하된 관세율을 활용하여 미국산 일본차를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다, 유럽산 자동차의 공세까지 겹쳐 일부 차종에서 가격인하가 불가피한 상황
  - 미국에서 수입하는 승용차 수입관세는 2016년에 철폐되는데, TPP로 일본에서 수입하는 차에 부과하는 8%의 관세마저 없어지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되는데다, 부품·소재 등의 수입증가에 대한 경계감도 강함
- 한국 내에서는 미국 주도의 TPP에 대하여 반미, 친중 감정을 자극한다는 소리와 함께 한일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반일요소까지 합세하는 경우 교섭도 국내조정도 통제할 수 없게 됨

○ 교섭단계에서 한국의 TPP참가 가능성은 낮음

- 한국이 교섭단계에서 참가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한데, 가령 내년 초 교섭참가를 선언하더라도 美 의회가 끝나는 내년 봄에는 큰 틀은 타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이 타결 후에 참가했으면 하는 것이 미국의 본심이라는 설도 있음

○ 일본의 TPP참가가 계기가 된 한국의 TPP정책 궤도수정

- 국내 반대론을 누르고 미국 등과의 FTA를 성사시킨 한국도 TPP에서는 늦어지고 있음
- 이는 대형 FTA에 대한 피로감과 자만심 때문으로, 당초 TPP에 관심이 적었던 박근혜 정부가 궤도를 수정하게 된 데는 일본의 참가가 계기가 되었다고 네티케이신문은 보도
- “언젠가는 가입해야만 하며,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표현이 한국의 고뇌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